MB 소환되기 전… 자택앞 "구속하라"

이 전 대통령, 차량 안에서 굳은 표정으로 고개 떨궈… 지지자들 찾아볼 수 없고 구속 촉구 반대 시위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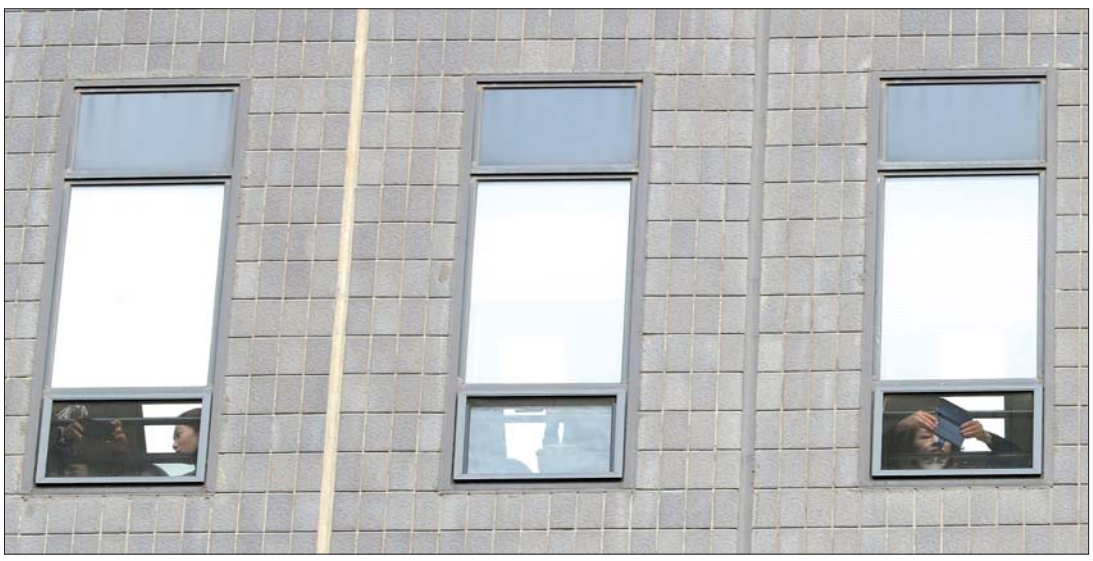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긴 침묵을 깨고 서울 논현동 자택 밖으로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4분께 자택을 나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자택 안 주차장에서 미리 검은색 세단을 타고 경호원들의 호위 속에 골목길을 빠져 나갔다. 1년 전 이맘때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한 차례 쳐다본 후 검은색 에쿠스 차량에 탑승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 전 대통령이 탄 검은색 세단은 차량 짙은 썬팅을 하고 앞에 앉은 운전기사와 수행원이 썬블러드로 가렸지만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면서 뒷좌석에서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 전 대통령이 바깥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26일 평택 천안함 기념관 방문을 마지막으로 자택에 칩거한 지 2주만이다. 그럼에도 자택 주변에는 지지자들을 찾아볼 수도 없었다.



MB 소환 바라보는 검찰 직원들 검찰 직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다.

대신 한 진보 계열 정당의 여성 당원이 이 전 대통령이 탄 세단을 향해 "이명박을 구속하고 비리재산 환수하라", "비리재산 환수해 미래복지 실현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우리 국민의 희망을 가져간 이명박을 가만히 둘 수 없다"고 절규했다.

자택 주변에는 지지자들이 몰려드는 대신 성난 민심만 읽혔다.

'이명박 구속,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비리재산 환수'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가훈이 정직-이명박, 감방 가즈아~!'라고 씌인 기다란 현수막을 펼쳐들고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기 전 자택 주변에는 이른 새벽부터 취재진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정작 자택 안은 전날부터 적막감이 감돌았다.

태극기가 꽂힌 자택 주변에는 철제 펜스로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됐다. 경찰은 5개 중대 400여명을 배치하고 자택 근처로 들어오는 골목을 막아 평소보다 한층 경비를 강화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중대한 날인 만큼 근처 상공에는 촬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출몰하기도 했다.

오전 5시30분께부터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한 자택에는 오전 6시가 넘어서자 차량들이 한 두 대씩 오가면서 차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담장이 높게 세워져 있어 집안 내부의 분위기를 살펴보기는 쉽지 않았지만 아침 일찍 침울한 표정을 한 측근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눈에 띄었다.

이 전 대통령을 수행할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랜 측근인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류우익 전 비서실장, 권성동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 이재오 전 국회의원 등이 자택 안으로 들어갔다.

측근들은 자택 안에서 이 전 대통령과 담소를 나누고 검찰 출두 전 위로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의 방문을 받기 전 전날 밤 늦게까지 변호인단과 조사에 대비해 변론 전략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다섯 번 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된다. /뉴시스

김백준, 혐의 인정… "변명 않고 속죄하겠다"

'MB소환일'에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방조 첫 공판… MB 검찰조사 "진실 밝혀지길 기대"

이명박(77) 전 대통령 '집사'로 통하는 김백준(78·구속기소) 전 총무기획관이 14일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발언권을 얻어 "저는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전 대통령 검찰조사를 거론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건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 기록을 복사·열람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다만 재판부가 "대체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정리하면 되겠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께 현금으로 2억원씩 청와대 인근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모(52·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측은 김 전 기획관에 앞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혐의에 대해 향후 다투겠다는 취지를 전했다.

김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 일부에 있어서 다투는 게 있고 횡령, 뇌물 범죄에 있어서 증거 입증 취지가 정확하지 못한 게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0년 관련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비서관 역시 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청와대 파견검사로 민정2비서관을 거친 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인천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 성공가도를 달렸다.

두 사람은 지난 1월17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특활비 외에 다스(DAS) 관련 비자금, 횡령, 배임, 뇌물, 청와대 문건 불법 반출 및 은닉 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는다. /뉴시스

김영록 농림장관, 전남지사 출마 선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14일 6·13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수장으로서, 일원으로서 큰 애정을 갖고 있는 농식품부를 내일부로 떠나서 정치 여정에 나서게 됐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당의 권고에 따라 지난 12일 불출마를 선언한 직후 기다렸다는 듯 "전남도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하고 있다. 국무위원으로서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의 전남지사 도전으로 민주당 경선은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이 전남지사 출마를 준비 중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장관인 그가 고작 8개월여 만에 물러나 '단명(短命)'한 장관으로 남게 됐다.

/뉴시스

정치권, MB 소환에 "처벌" vs "盧 죽음 정치보복"

정치권은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데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며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도 20여개 범죄행위에 대한 피의자 신분인 만큼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확정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정정당당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번 검찰 조사는 더 이상 불운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를 통한 면박주기 수사가 노 전 대통령 죽음의 중요한 이유였고 그것이 정치보복이라면 9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전직이든 현직이든 결코 예외일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억울함을 표명했지만 뇌물수수·배임·횡령 등 온갖 혐의는 피할 길이 없다"며 "국민 다수의 지지로 선출된 대통령이 어찌 이렇게 국민의 기대를 배신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앞서 '참담한 심정으로 섰다'고 표현했지만 지금 참담한 심정인 것은 오히려 국민"이라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를 반면교사 삼아 역사에서 이런 일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전 대통령은 한국을 MB주식회사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라며 "그는 권력과 측근, 가족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 공익을 버리고 사익을 챙긴 대통령, 법치를 버리고 불법을 범한 대통령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검찰은 오늘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모든 죄를 밝혀야 한다. 좌고우면 말고 구속수사하기 바란다"며 "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만큼 자신이 지은 죄를 남김없이 실토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시스